



1980년 5월 16일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민족민주화대성회 현장.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계엄군의 만행을 성토했으며 공동체의 의견을 결집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는 ‘5·18 헌법’을 원한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계엄도 막아낸 민주주의의 보루

‘오월정신’ 계승·사회 통합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쓰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序文)이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창설이나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5년이 지난 현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5·18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운 역사적 사건일뿐 아니라 전세계에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로서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 근원에는 독재와 압제로부터 자신의 가족, 이웃, 공동체를 지키려는 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피로 항거한 ‘5·18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논의는 40여년 동안 공전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지난 1948년 제헌 이래 9번 개헌이 이뤄질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됐다. 1962년 제5차 개헌 때는 4·19의거가 헌법전문에 명시되면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1987년 제9차 개헌을 끝으로 헌법전문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다.

헌법이 5·18을 외면하는 사이 5·18 정신은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훼손돼 왔고, 5·18은 왜곡과 폄훼를 당해 왔다.

보수 논객이나 정치인들이 5·18 역사를 부정하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됐다.

최근까지도 광주 시민이 신군부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거리에 버섯이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등 왜곡 현수막이 걸려 있고, 불과 지난해에도 과거사의 왜곡·왜곡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두둔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만에 비상 계엄이 발동되면서 광주 시민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물거품이 될 뻔한 위기까지 찾아왔다.

이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시대의 과제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5·18을 다룬 책 ‘소년이 온다’의 저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18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만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적기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5·18 희생자들의 묘비를 닦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됐다.

광주시민들은 반복되는 5·18 폄훼·왜곡의 뿌리를 뽑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명문화돼야 5·18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국가와 국민의 정신에 미치는 궁극적 기준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정신은 국민이 국가폭력에 맞서 지켜낸 민주주의로서 대한

민국의 뿌리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5·18 정신을 분명히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에 새겨 사회적 통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청원 목표 수 채웠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국민청원 운동이 등록 이틀 만에 사전 동의 목표 수를 채웠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4일 국회전자청원에 등록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청원(<https://m.site.naver.com/1HXTg>)이 1차 목표 찬성 수인 100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원 목표 찬성 수를 달성함에 따라 국회는 7일 이내에 청원을 국회 누리집에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청원은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공개 청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은 공개 청원 전환 시 국회 청원 제출 조건인 ‘30일 이내에 최소 5만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국민 청원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17일 5·18 전야제에서 홍보 부스를 열고 ‘27일부터 청원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유인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며, 전국 5·18 행사위원회와 협력해 대국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안내도 병행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정신은 국가폭력에 맞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상징임에도 여전히 5·18의 진실은 왜곡되고, 그 숭고한 정신은 일부 세력에 의해 폄훼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약속으로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발포명령자·행방불명·암매장

미 해결 3대 의혹 꼭 규명해야

해마다 5월이 오면 광주의 심장은 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린다. 45년이 지났음에도 어김없이 광주를 옥죄어 온다. 5·18은 법적·행정적 제도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 미해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1980년 오월 계엄군의 총부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은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과제임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명령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45년간 풀리지 않은 또 다른 5·18 핵심 의혹이 바로 ‘행방불명’과 ‘암매장’ 문제다. 1980년 5월 사라진 사람을 찾는 가족이 광주시에 신고한 행방불명자는 242명에 달한다.

암매장을 비롯한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